

오피니언

7

사설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상으로 해법 찾나

지난 17일 우리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5% 초반대로 등록금 인상을 합의했다. 또한 서강대, 국민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가 연이어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등록금 동결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대학은 재정 악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16년이나 마주해야 했다. 더 이상의 동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왕에 늘어나는 등록금 수입이 어느 정도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2009년 이후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제한해 왔다. 더불어,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1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탓에 대학의 다른 수건 쥐어짜기 식의

운영은 한계에 부딪혔다. 국가장학 지원보다는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는 대학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은 대학 시설을 초·중·고등학교보다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동결이 지속되는 동안 대학은 물가 상승, 학령인구 감소, 최저임금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전방위로 받고 있다. 여름철이면 시설물 곳곳에서 비가 새 양동으로 빗물을 받는다 하면, 실습 공간이 없어 화장실을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매해 반복되는 소통간담회에서도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대응이 이뤄졌다.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교원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연구 공간이 부족해 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등록금 인상은 학교 미래와 직결된 문제

열악한 연구 환경은 결국 교원 이탈까지 이르게 됐다.

교원 이탈률 증가는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나타났다. 우리학교는 '전임교원 확보율' 부문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열악한 연구환경이 높은 교원 이탈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낮은 전임교원 비율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 연구 기회 감소, 강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어쨌든 대학은 16년간 이어진 동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학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과감한 투자로 등록금 인상의 명분을 증명해야 한다. 당장 올해 도입 예정인 무전공 제도와 더불어,

교육 혁신 모델 구축, 계약·첨단학과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수다. 공대 분관신축, 스마트팜 온실 건설 등 계속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도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 운영의 재구조화 역시 필요하다.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약 61%로, 다른 주요 사립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대학의 재정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장기적으로 국고 지원 확대와 기부금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 다각화를 이루는 노력도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대학의 요구와 학생 부담 가중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인상은 우리학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다.

세시봉

'청년' 남용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난입했다. 이들은 건물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법치주의를 짓밟은 '폭도'들은 모두 무관용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태를 전후로 '청년'을 남용하는 일부 언론과 선동자들을 보며 더욱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2030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많이 연루된 것은 사실이다.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붙잡힌 90명 중 20~30대가 절반이 넘는 46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2030 세대의 주요 갈등 구도라고 일컫어지는 '젠더 갈등'을 도구로 삼았다. 심지어 한 전문가가는 폭동 사태를 설명하며 남성의 '마초이즘'을 결부시키기도 했다.

응원봉을 흔든 평화적 '집회'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은 상식과 비상식의 영역이다. 참여 인원 성별에 수치상 차이가 다소 있을 수는 있어도 이를 남녀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이를 젠더 갈등의 연장선으로 분석하려 든다. 이는 젠더 갈등이라는 이슈에 억지로 올라타려는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다.

이 사건의 본질은 비상식적인 폭동과 선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폭동 이후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을 당부했지만, 지그재그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동한 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담을 넘는 이들이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언행이 작금의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 지도자로서 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세력들에게 '청년'이란 단어가 남용돼 청년으로서 불쾌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했다며 지지세 결집에 청년을 활용했다. 김민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원했다"며 공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여의도를 수놓으며 아름다운 순간을 보낸 청년들의 모습은 애써 외면 중인 듯하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 사퇴

가벼운 학생자치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자율전공학부가 학생회장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1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사퇴사에서 밝힌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일신상의 이유'라는 다소 상투적인 표현만 남겼다. 다만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밝혔지만, 이것 역시 공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숙고했는지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자율전공학부는 올해부터 무전공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입생이 대폭 증원됐다. 작년 72명 규모에서 올해 165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와 교육 환경 공간 문제는 행정만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온전한 학생 자치를 통해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비대위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새터, MT 등 과 행사에서 학생 자치의 부재로 새내기들의 의미 있는 경험 또한 희미해질 수 있다.

학생회장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소통한 방식은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했다. 학생 자치는 단정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 과업이다. 학생회 임원으로서는 책임의 무게를 견디고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자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생 자치의 무게가 가벼워진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되돌릴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시점이다. 학생회장의 자리는 오르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것은 아니기에, 학생 자치를 책임지는 학생회장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만평 학생회장이 흔들리면 학생자치 역시 함께 흔들린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